

서민금융정책 추진현황

2013. 10. 30



금융위원회
FINANCIAL SERVICES COMMISSION

목 차

01 서민금융 현황

02 정책 서민금융의 강화

03 민간 서민금융의 방향

1. 서민금융 현황

1-1. 서민금융 정책방향

국정철학

서민들이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
“따뜻한 금융” 구현

정책 서민금융의 효과적 지원

- **국민행복기금**을 통한 자활기반 강화
- **서민금융총괄기구** 설립 등을 통한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
- **서민금융상품 개선** 및 **인프라 구축**

민간 서민금융기관 육성

- **지역밀착형, 관계형 금융** 활성화
- 제2금융권 **금리체계 합리화**
- **대부업 감독체계** 등 제도개선

서민층이 스스로 “자립 · 자활” 할 수 있는
다양한 서민금융 정책 추진

1-2. 국내 서민금융 구조

■ 국내 서민금융 체계는 “**민간 금융회사**”와 “**정책 서민금융**”으로 구분

- (민간 금융회사)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 (상호금융, 저축은행, 여신전문금융사, 대부업체 등)
- (정책 서민금융)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저금리 대출, 보증 및 채무조정 등 수행

< 현행 서민금융 구조 >

서민금융		지원방식	지원창구	주요 지원대상 (신용대출 기준)	금리수준
민간금융	대출 (신용, 담보)		은행	신용 1~3등급	5~14%
			상호금융	신용 2~6등급	10~25%
			여전회사	신용 4~7등급	20~35%
			저축은행	신용 5~9등급	25~39%
			대부업체	신용 7~10등급	35~39%
정책금융	미소금융		미소금융재단 (은행, 기업, 지역)	신용 7~10등급 (사업 자금)	2~4.5%
	햇살론		상호금융, 저축은행 등	신용 6~10등급 (생계, 사업 자금)	9~12%
	새희망홀씨		은행	신용 5~10등급 (사업 자금)	6~14%
	개인워크아웃		신용회복위원회 등	신용 9~10등급 (채무조정)	-
	바꿔드림론		KAMCO	신용 6~10등급	8.5~12.5%
	기초생활보장		정부	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자	-
복지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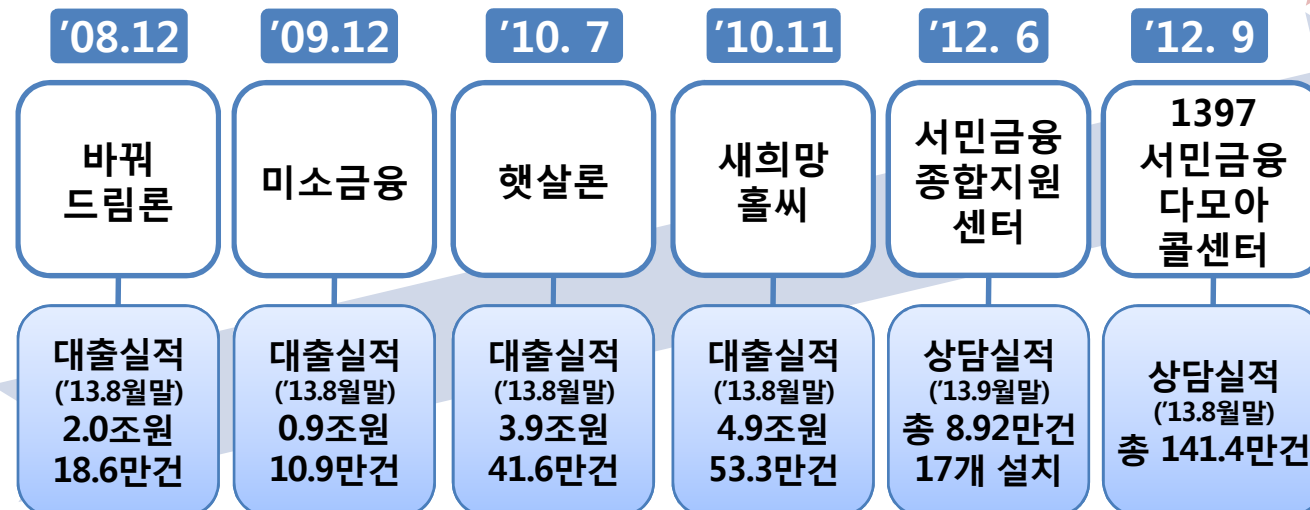
1-3. 정책 서민금융 지원체계 : 역사적 흐름도

신용회복

카드사태



서민금융



'13. 9

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

-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**유관기관 통합**
- 서민금융상품 운영개선을 통한 **지속가능성 확보**
- 서민금융의 質的개선 위한 **인프라 구축**

1-4. 정책 서민금융 지원체계 : 주요 성과

① 서민정책금융 공급체계 확립

- 서민 우대금융을 통해 '08년~
'13.8월말까지 **총 11.7조원** 공급
- * 미소금융 ('09.12월 도입, 0.9조원),
햇살론 ('10.7월 도입, 3.9조원),
새희망홀씨 ('10.11월 도입, 4.9조원)
바꿔드림론 ('08.12월 도입, 2.0조원)

② 서민금융 창구 확대

- (오프라인)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
- '13.9월말 현재 총 17개 설치(지자체)
- (온라인) 서민금융 나들목 개설
* '12.6.14 포털 사이트 오픈
- (콜센터)"1397 서민금융 다모아"
* '12.9.24 오픈

서민의 금융관련 고충 해소

③ 불법 사금융 척결

- 불법행위 단속 및 피해자 구제
- * 12년 정부합동 불법 사금융 척결 추진실적 :
불법업자 검거 10,702건, 법률상담 985건,
서민금융지원 667건 등
- 금융 소비자 보호제도 개선
- 불법 채권추심행위 규제,
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도입 등

④ 고금리 채무부담 경감

- 최고금리 인하(대부업법)
- (~'09)49% → ('10)44% → ('11)**39%**
-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
- 민간 자율합의에 기반한 채무조정 실시
- * '08년 이후 약 78.7만명 수혜

2. 정책 서민금융의 강화

2-1. 추진 배경

필요성

■ 서민금융, “양적 공급확대”에서 “**질적 개선**”으로

-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‘취약계층 증가’ 대두
- 단순한 양적 지원 확대는 자활능력 제고가 아닌, ‘부채의 연장’에 그칠 가능성

■ **수요자 요구**를 효과적으로 **충족**하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

- 복잡다기한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저리자금, 신용회복, 신용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 추진

정책방향

■ **국민행복기금**을 통한 연체자 자활기반 강화

- 금융기관 장기연체채무를 집중하여,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제공
-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시켜주어 가계채무부담 완화

■ **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** 등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

- 금융지원과 복지·고용을 연계하여 종합적 서민 자활지원체계 마련

2-2. 국민행복기금 (1) : 주요내용

'13.3.29(금)
국민행복기금
출범

특징

- 채무재조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금융회사·대부업체간 **"신용회복 지원협약"**을 확대 체결 (221개→4,213개)
-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**채무감면율 확대** (30%→50%)
- 고용노동부, 중소기업청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연계하는 등 **자활기회 확대**

지원내용

-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

채무조정

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,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

바꿔드림론

제2금융권·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(20%이상)를 저금리 은행대출(10% 내외)로 전환

2-2. 국민행복기금 [2] : 추진 실적 및 평가

국민행복기금 출범시 예상 수준을 크게 상회한 금융채무 연체자 지원

- ▶ 당초 5년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던 32.6만명 중 **절반 이상인 18만명**을 **6개월**만에 지원

■ 공약 내용에 대한 이행상황

구 분	공약 내용('12.11월)	이행 상황
지원 대상(예상)	320만명	345만명 (금융회사 · 대부업 채무자 134만명 + 공적 AMC 채무자 211만명)
초년도('13년) 채권매입 규모	120만명	284만명 (신규채권 매입 106만명 + 공적 AMC 이관 178만명)
지원규모	매년 약 6만명 (5년간 30만명)	<u>(실적) 6개월간 18만명</u> (예상) 5년간 32.6만명

2-2. 국민행복기금 (2) : 추진 실적 및 평가

既 추진한 공적AMC (한마음금융, 희망모아 등)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실적

연체채권 매입 대상자 345만명의 채무 중 **284만명(82.3%)** 매입, 이관

- 특히, 금융회사 · 대부업의 협약가입 유도로 신규 134만명 중 106만명 채무 매입(79.1%) 이는 '04~'05년 한마음금융 · 희망모아 채권매입비율 36.7%의 두배를 상회 [한마음 4.6% + 희망모아 32.1%]
- 상호금융 · 대부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채무자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평가

채무조정 6개월간 채무불이행자 **18만명 지원**

- 한마음금융, 희망모아의 9년간 실적 72만명(연 8만명)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적

2-2. 국민행복기금 (2) : 추진 실적 및 평가


[도덕적 해이] 이용자는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계층이 대부분

- 평균 연체기간 : 5년 10개월
- 평균 연 소 득 : 523만원 (2천만원 미만인 대상자 전체 83.0% 차지)
- 총 채 무 액 : 1,189만원 (2천만원 미만인 대상자 전체 83.2% 차지)

[무한도우미 등] 관련 기관 간 협업 지원, 고용지원 등 상환능력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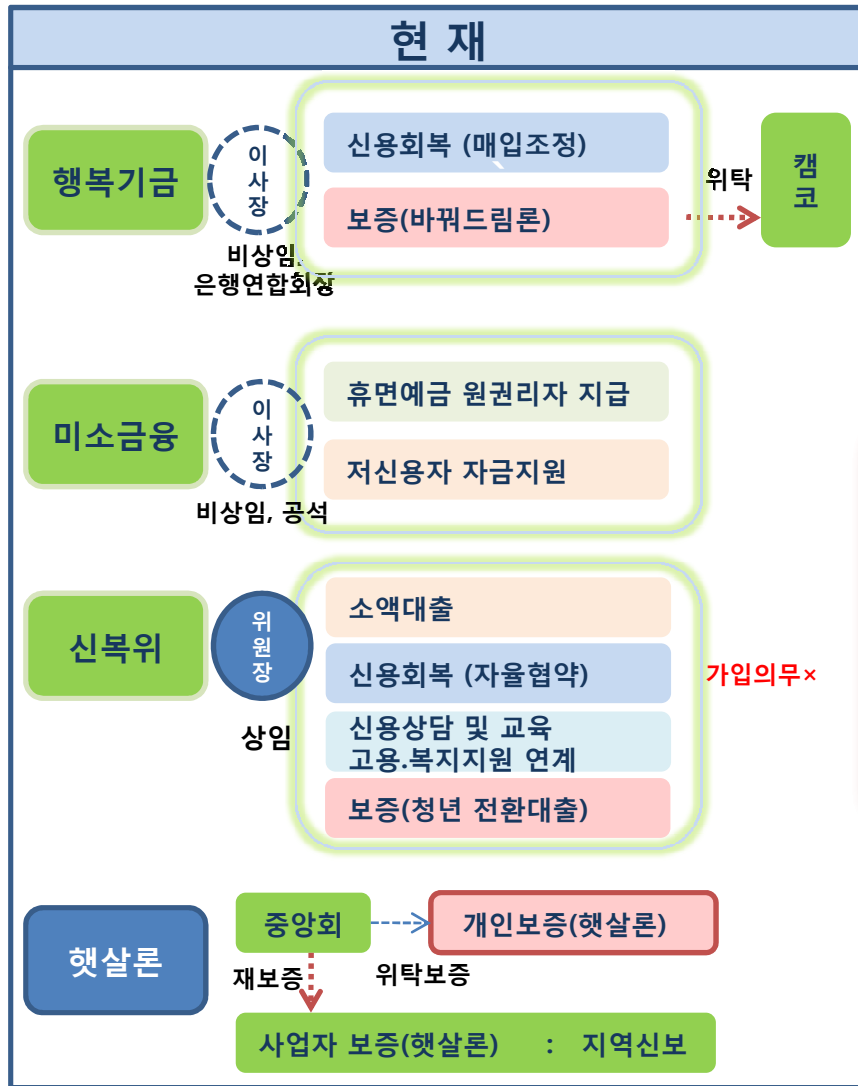
- 무한도우미팀을 구성하여 지원곤란 사유를 확인하고 최대한 지원
 -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가능한 지원 수단으로 적극 안내
 - 총 6,198명에 대해 무한도우미팀을 통한 추가 지원 완료 (9월말 기준)
- 취업 등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적극 실시
 -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658명 지원 (9월말 기준)

2-3.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: 주요내용

 서민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, 수요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

-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적, 유기적인 지원체계 구축
 - 신복위, 미소금융, 국민행복기금 및 햇살론의 개인보증 기능을 분리하여 서민금융 총괄기관으로 통합 설립
 - (가칭) 「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」 마련
- 서민금융상품 운영개선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및 내실화
 -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조건 통일, 햇살론 보증비율의 단계적 정상화
 - 은행약관 개정 추진, 다양한 상품 개발 추진
- 서민금융의 “質的개선”을 위한 인프라 구축
 - 신복위의 사전상담·조정 활성화를 통한 공·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
 - 서민금융 One-stop 서비스 제공, 유관부처(복지부, 고용부, 중기청) 연계

2-3.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: 종합 지원체계 구축



2-3.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: 서민금융상품 운영개선

1. 새희망홀씨 · 햇살론 통합

▶ 지원 조건 통일

▷ 새희망홀씨:
5등급이하(4천만원)
3천만원 이하

▷ 햇살론
6등급이하(4천만원)
2천 6백만원 이하



▷ 공통기준 :
6등급이하(4천만원)
3천만원 이하

2. 서민금융의 지속 가능성 확보

▶ (건전성 확보) 보증비율(95%) 단계적 정상화 추진 및 보증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* 업권별 보증재원 통합관리, 보증비율 차등화,
보증 취급기관 사후평가 강화 등

3. 미소금융 사업모델 및 지배구조 개선

▶ (재원 안전성) 은행약관 개정으로 휴면예금 지속 확보

▶ (상품모델 개발) 소외계층의 자금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개발

- 금리 차등화된 다양한 단기, 소액상품 개발
- 성실상환 유인강화를 위한 대출상품 구조 검토
- 단계적 전대비중 확대, 전대기관 인증제도 등 도입

▶ (사업역량 강화) 지배구조 개선(이사장 상임화 등), 지역재단 전문가 확충, 지역 소상공인센터와 협력, 서민금융 관련 협의회와의 유기적 운영

2-3.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: 서민금융의 質的 개선 추진

1. 신용회복위원회 법정 기구화

- ▶ (법적 근거) 일정규모 이상 금융회사, 대부업체 가입 의무화 검토
 - 신용회복지원의 효과성 제고
 - 공공기관과 연계지원을 위한 공공정보 접근 등에 유리

2. 신용상담, 고용·복지 지원 연계 강화 등

- ▶ (신복위 신용상담기능 확충) 신용상담 및 교육 Hub化
 - 서민금융 연체자, 채무조정 신청자 등에 대해 신용상담 및 교육 의무화
 - 신용상담사 자격의 국가공인자격증化 추진 및 활용방안 검토

- ▶ (상환방식 개선) 상환능력을 감안한 다양한 상환방식 도입 및
채무조정위원회 지배구조 개선(채무자 대표 포함)

- ▶ (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활성화) 설치 확대, 인센티브 체계 구축,
정기적 협조체계 마련 등

- ▶ (고용·복지와 연계) 고용부, 중기청의 취업·창업지원과 여타
서민금융 이용자에도 지원, 서민금융 종합
지원센터, 지자체 복지·고용센터 간 연계

3. 공사적 채무조정간 역할 재정립

- ▶ (사전상담 확대) 서울지방법원과 시행 중인 Fast Track 홍보 강화,
타 법원과 추가MOU 체결 추진

- ▶ (사전상담 노력제고) 통합도산법 개정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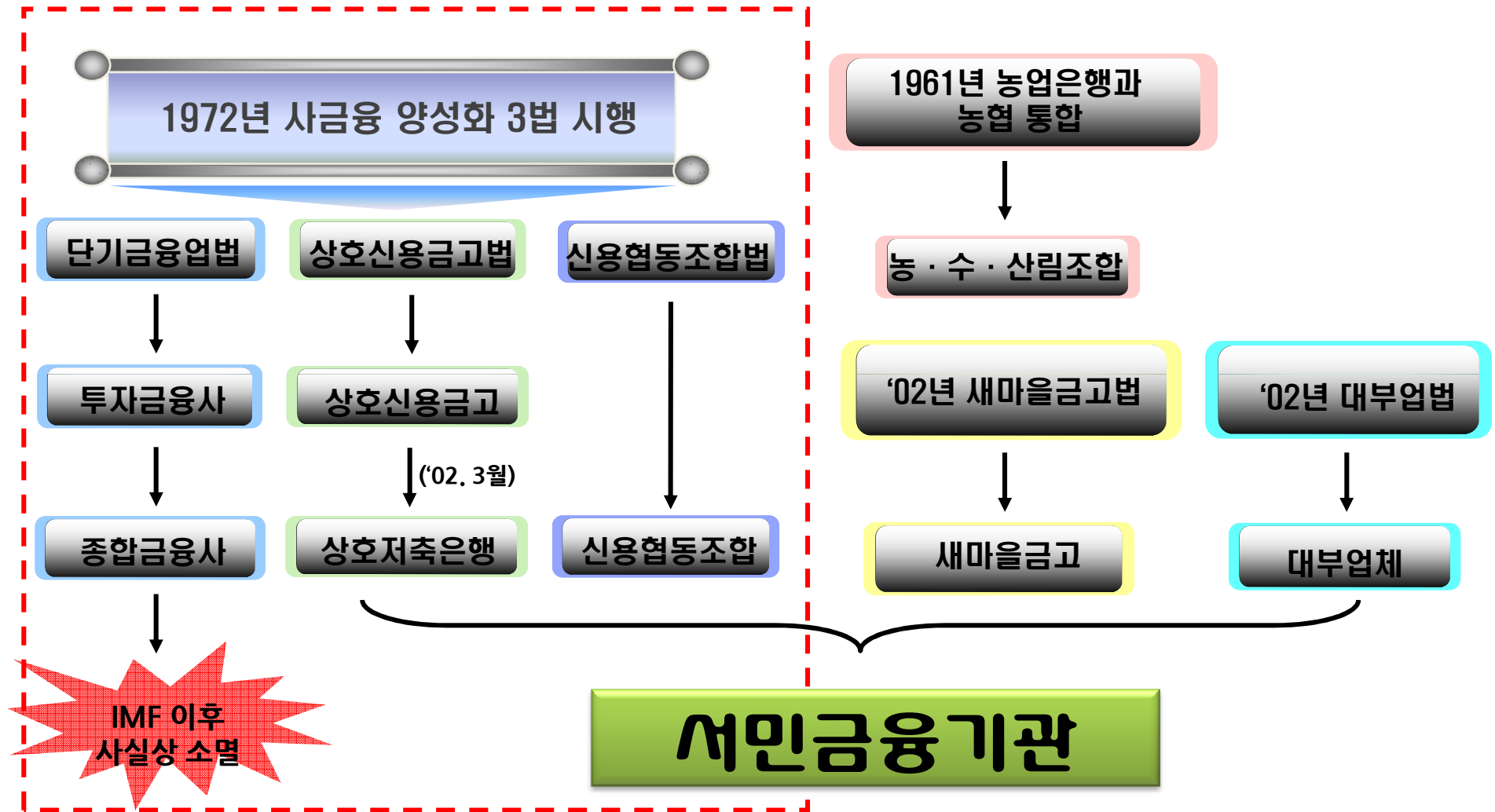
2-3.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: 기대효과

서민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자활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종합적, 효과적 지원이 가능

- ▶ 수요자 중심의 **One-stop 서비스** 제공, **지속가능한**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
 - 분절적 운영에 따른 중복지원 및 지원기준 차이 등 해소
 - 서민금융 재원 확보 및 건전성 관리 강화
- ▶ 민간 서민금융의 **“금리단총현상”** 해소에 촉진제 역할 수행
 - 10%대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출시 등을 통해 서민금융시장 內 경쟁촉진 및 금리단총해소를 위한 여건 조성 가능
- ▶ “量的” 자금공급 중심에서 서민금융의 **“質的 改善”** 을 도모
 - 서민자금 지원(제도권 금융접근 곤란 가게), 신용회복지원(高부채 가게), 일자리 연계(소득부족 가게) 등 **서민층의 life-cycle별 맞춤형 지원**
 - 서민층 신용상당 ·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**“사회안정망”** 강화

3. 민간 서민금융의 방향

3-1. 민간 서민금융 체계 : 역사적 흐름도



3-2. 저축은행 정책방향 : Back to the Basic

“서민중심의 신뢰받는 지역 금융회사로의 역할 제고”

1. 관계형 금융 활성화 위한 정책 로드맵 마련

- **[현황]** 현재 관계형 금융은 **논의단계 수준**
 - 저축은행 발전 및 서민·중소기업 금융공급의 대안
- **[개선]** 민관협의체 구성, **정책 로드맵 마련**
 - 정성적 정보 수집·관리기법 보급, 정보활용 대출 가이드라인 개발 등
 - 자산건전성 분류 등 감독·검사기준에 반영 방안 검토

2.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기능 제고

- **[현황]** **7등급 이하 고금리대출 위주의 영업**
 - 대부업체와 유사한 영업행태
- **[개선]** 여신심사 역량 확충을 통한 **중금리대 대출상품 개발 유도 및 정책금융 취급허용**
 - 5~6등급 고객층 대상 10%대 대출상품 개발필요 (금리단층 현상 완화)
 - 미소금융(전대), 보증자리론 등 취급허용 검토 중

3.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→ 제도적 기반 구축

- **[현황]** **예대 중심의 단순한 영업구조**
 - 지역 내 다양한 금융수요 X, 경제상황 변화 취약
- **[개선]** **다양한 부수업무 취급 → 고객저변 ↑**
수수료 수입 ↑ → 영업기반 확충
 - 펀드판매, 할부금융 등 세부 시행기준 마련

4. 점포 설치기준 합리화 → 지리적 접근성 ↑

- **[현황]** **점포 설치의 엄격한 제한**
 - 취약한 점포망을 대출모집인으로 보완
- **[개선]** 영업구역내 **점포설치기준 합리화**
접근성 ↑, 지역금융기관 역할 ↑
 - 지역밀착·관계형 영업충실 저축은행(수도권제외)

3-3. 여전사 정책방향 : 금리체계 합리화

추진배경

■ 여신금융회사 등은 지속적인 대출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, 금리산정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

- 대출금리 산정 기준의 불분명으로 금리체계의 합리성, 투명성 미흡
- 금융회사별 자체등급에 따른 대출금리 공시로 소비자의 금리비교 가능성 등 제약

➡ 「대출금리 모범규준」 및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

주요내용

■ 대출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,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

- 비용은 원가 항목별로 분리 계상하고, 대출과 무관한 비용은 원가에 반영불가
- 금리관련 회원 고지 강화, 금융사의 대출금리 산정관련 내부통제 기준 등 마련

■ 금융회사별 임의적 기준 ⇒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가능성 제고

- 외부 신용조사회사(KCB, NICE) 신용등급(1~10등급)을 기준으로 평균 금리 공시

3-4. 상호금융 정책방향 : 건전성 제고 및 관계형 금융

건전성 제고

- 대손충당 능력 강화 : 경제침체 장기화 대비
- 고위험대출 규제 신설 : 일시상환, 거치식 대출 및 다중채무자 대출 규제

상호금융 정체성 확립

- 지역밀착형, 관계형 금융이라는 상호금융의 정체성 확립
 - 상호금융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, 영세기업 등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
- 제1금융권과 차별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모색

3-5. 대부업 정책 방향 : 감독체계 개편

추진배경

■ 급격한 대부업 시장 변화로 기존 제도의 한계점 노출

- 대부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, 대부분 영세한 개인 대부업자로, 소비자 피해우려 및 관리·감독상 어려움 발생

* 10,895개 업체 중 개인 9,188개(84.3%), 소형법인 1,578개(14.4%) ('12말 기준)

- “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”를 중심으로 대부시장이 확대되어 보다 종합적,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
- 다양한 영업범위와 행태를 가진 대부업을 단일한 업무분담 체계로 관리,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

■ 대부업체가 **적정한 자본력, 인적·물적 요건**을 갖추도록 하여 영세업체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

■ **전국적인 영업망**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**제도 정비**

■ 다양한 업태, 영업범위에 적합하게 중앙, 지방정부 등 **기관 간 기능조정**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·감독 모색

3-5. 대부업 정책 방향 : 감독체계 개편

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
이용할 수 있는 대부시장 형성

대부시장 정비 및
관리감독 효과성 제고

등록요건 등 정비

대부업,
대부중개업,
매입채권추심업
구분 명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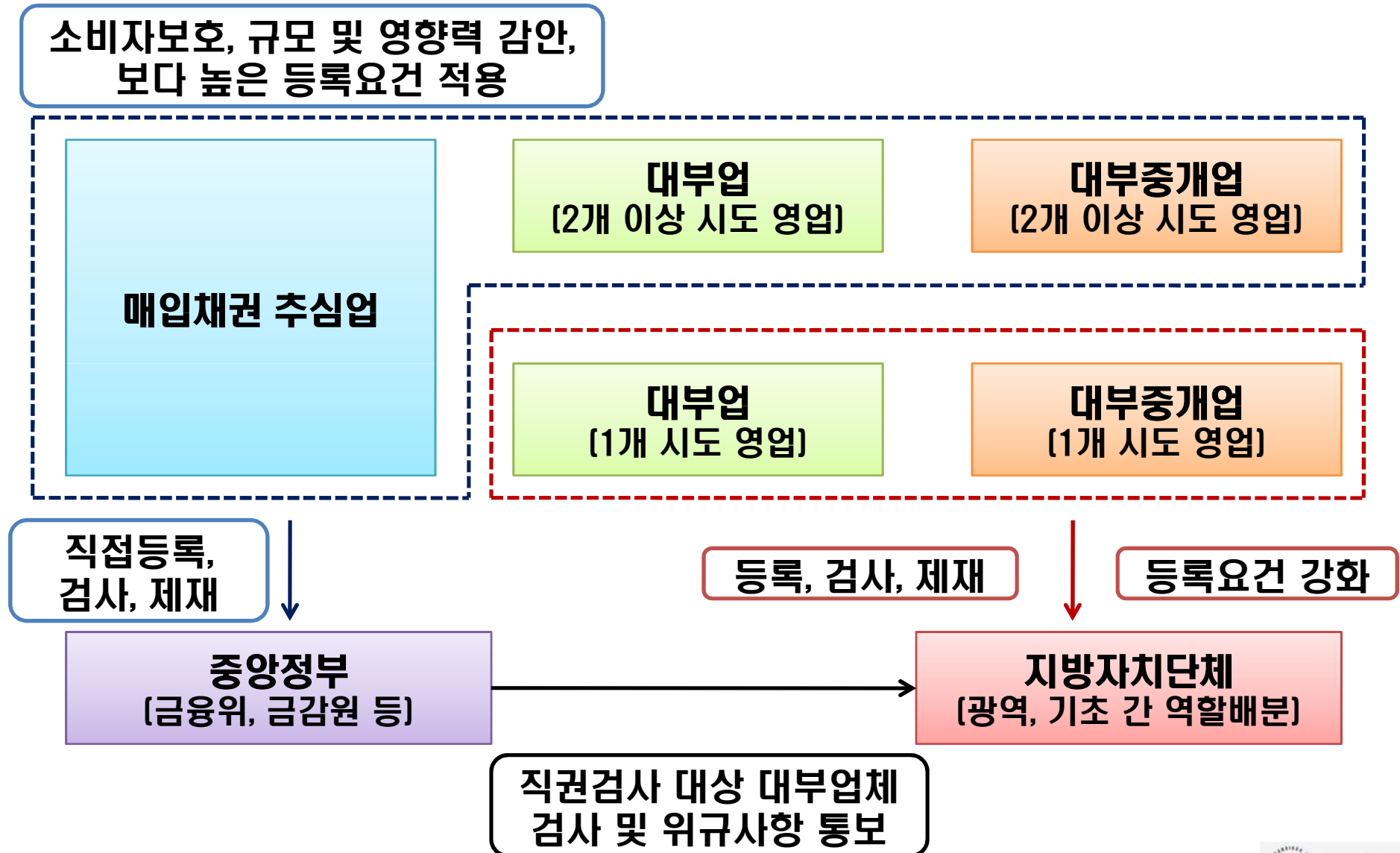
자본금 및
인적 물적 요건
도입

관리 감독 체계 개선

매입채권
추심업체 등
중앙정부
직접 관리 감독

중앙정부 및
지방정부 간
정보교류 및
협조체계 강화

3-5. 대부업 정책 방향 : 감독체계 개편



감 사 합 니 다



금융위원회
FINANCIAL SERVICES COMMISSION